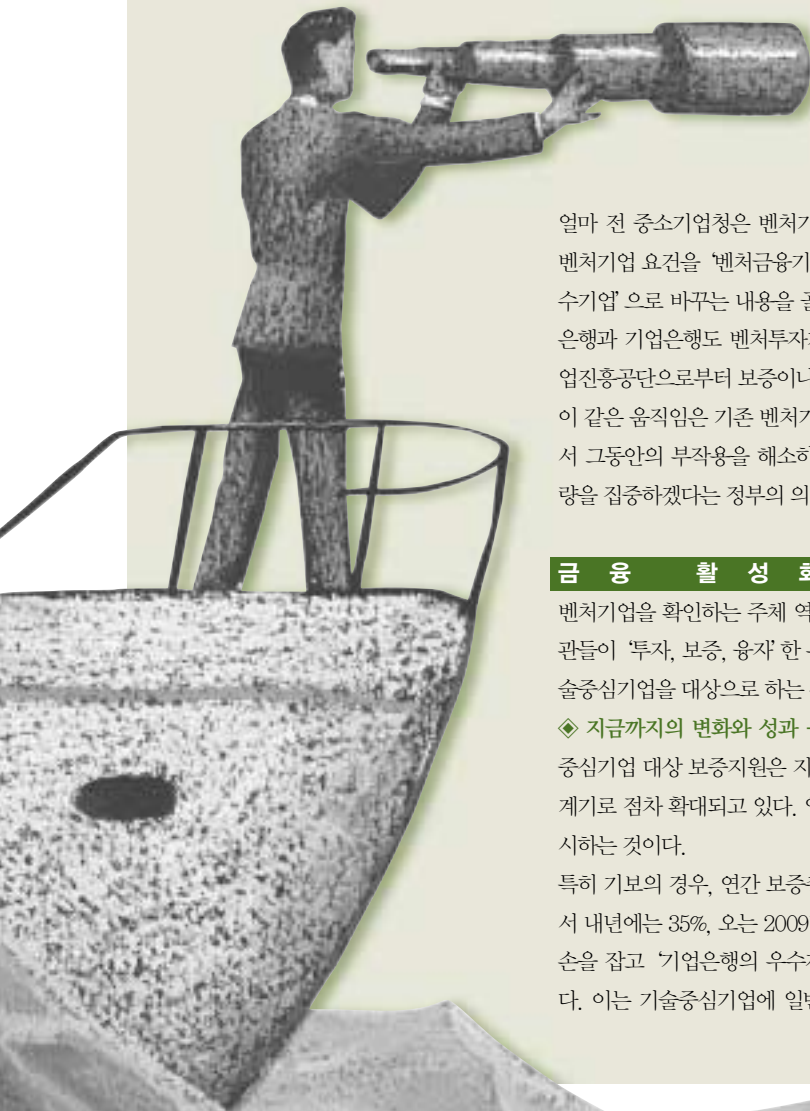


# 기술중심기업 관련 보증제도와 기업평가

기술중심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보증제도와 기업평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을 담보로 한 보증을 늘리고, 전문가와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평가를 추진함으로써 기술중심기업들은 한층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일부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벤처기업 요건을 '벤처금융기관이 평가해 자기위험 부담으로 투자, 보증, 융자한 기술우수기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벤처투자기관으로 새롭게 합류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이나 융자 수혜를 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존 벤처기업 가운데 상당수 비혁신기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진정한 기술중심기업을 선별해 제한된 자원과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금융 활성화의 첫 걸음, 기업평가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주체 역할을 맡게 된 투·융자기관 역시 주목을 받게 됐다. 이 기관들이 '투자, 보증, 융자'한 우수기술 보유기업만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됨으로써 기술중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및 보증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과** -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나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중심기업 대상 보증지원은 지난 6월 23일 발표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계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영업상태보다는 기술력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기보의 경우, 연간 보증총액 가운데 기술평가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35%, 오는 2009년에는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난 7월에는 기업은행과 손을 잡고 '기업은행의 우수제품 상품화 대출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는 기술중심기업에 일반대출보다 1~2%p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보 측은 기업은행이 공모를 통해 추천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한 뒤 신용보증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고 10억원까지 보증지원했다.

그밖에도 산업은행이 1천억원 규모의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을 신설해 운용함으로써 기술평가금융 활성화에 합류하는 등 기술중심기업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려는 여러 변화들이 눈에 띈다. 금융기관들이 기술평가 표준모형을 마련해 기술중심기업에게 신용대출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 **보증체계 개편방향 제언** - 우선 기술중심기업의 창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증체계여야 한다. 기술중심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담보력이 없거나 기술력이 가진 사업성이 불확실하므로 창업단계의 자금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중심기업은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개발 또는 기술혁신 이외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 재무 및 회계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 구매서비스 등 경영지원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증기업의 성장기회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 중심 기업 보증 방법 다양화 추세

기술중심기업 금융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중심기업 관련 투자의 특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기술중심기업은 기존에 축적된 시장성과가 없으며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정보를 이용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기술중심기업에 대한 기업평가는 일반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정형화된 분석틀로는 적절치 않으며 투자자들의 주관적인 기업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기업평가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투자자들이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상황에서는 금융이 위축될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중심기업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평가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에 선별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 기술중심기업 투자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활발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주관적 기업평가 위한 전문가 양성** - 벤처캐피털리스트, 엔젤투자자, 성공한 벤처기업가 및 대기업 정년퇴직 임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들은 기술중심기업 금융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와 경영자문능력을 갖추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중심기업 금융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벤처캐피털리스트 간의 경쟁을 유도해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의미이다.

◆ **기업평가 인프라 구축** - 기술중심기업 금융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은 시장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소수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기술중심기업 시장의 존립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술중심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아 가치평가와 감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합 출자자 및 일반 투자자들이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 우선 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벤처캐피털리스트 및 투자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KBAN(한국비즈니스엔젤네트워크)가 활성화돼 기술중심기업에 대한 평가경험이 축적되고 나면 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기청,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자금 회수 청신호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창투자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 있다. 창투자조합의 만기 시에 현물자산이 없는 경우 현물자산 처분 시까지 창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M&A 등을 통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돕는 경영지배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자금 회수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해 창투사의 경영참여를 허용해 투자자금의 적극적인 회수 기반을 마련(05년 시행령 개정 추진)한 중소기업청은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창투자(조합)가 보유하는 현물자산의 원활한 인수를 도모할 방침이다.

참고로 부실자산인수 펀드를 포함한 세컨더리 펀드는 이미 2004년 말에 1300억원이 조성됐다.